

2012, 살 만한 삶을 위한



목 차

인사의 말: 살만한,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하여	_003
총론: 우리가 사는, 살아갈 세상	_007
진보신당의 10대 핵심정책	_013
분야별 정책과제	_056

살 만한,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심판’에 두고 있습니다. 야당은 반MB, 반새누리당을 이야기합니다. 새누리당은 정책 말 바꾸기 야당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2012년은 심판의 해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심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서, 박정희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서, 노무현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선거는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를 그리는 선거여야 합니다. 진보신당의 정책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물려줘서는 안 될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핵은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재앙입니다. 핵발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탈핵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은 단순히 임금 격차 문제만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

이 비정규직으로 인해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탈비정규직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더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식의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순 없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곧 소득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탈학벌이 필요합니다.

재벌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부당하게 갖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 시대의 괴물이 될 것입니다. 탈재벌/탈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하게 체결된 한미FTA를 폐기하고 호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땅히 탈FTA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게 사는 것인지 절박하게 묻고 싶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학생들은 세계 최장의 학습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힘들게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취직하고 나서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혹사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도 노후는 불안합니다.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율과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요? 이렇게 될 때까지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해 왔습니까?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치는 유지될 가치가 없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사람 몇 명 바꾸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반창고가 아니라 수술입니다. 부분적인 해법이 아니라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행복하게 만

드는 것이 정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당이 간판을 바꿀 때, 진보신당은 삶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 정책자료집이 살 만한 삶을 위하여 함께 꾸는 꿈을 나누는 데 보탬이 되길 희망합니다.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총선 정책을 마련하느라 수고하신 모든 정책위원 및 정책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당원 분들과 제작 과정에 함께 해주신 출판인쇄 노동자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보신당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 자료집을 살펴보실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3월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2012, 삶을 바꾸는 정치
제대로 된 진보, 진보신당

우리가 사는, 살아갈 세상

위기, 야만, 성장만능, 불통독재

4대강 재능노조 3포세대 삼성백혈병

사교육비 최고은 월화수목금금금

정리하고 자살률이혼을 박정근 명박산성

세계금융위기방사능비 **용산참사**

구제역 광우병쇠고기 무노조 어버이연합

출산기피 비정규차별 천안함논란 뉴타운

한반도온난화 이주노동자추방

천만원등록금 석유중독 **쌍용차사태** 부자감세

김제동퇴출 **후쿠시마** 론스타먹튀 연평도

한미FTA 임금격차 88만원 골목상권붕괴

불공정원하청 에너지빈곤 사유화 도가니

핵발전증설 **강정해군기지** 국격 학교폭력

공존과 조절, 정의, 전환, 연대

희망버스 산별교섭확장 토건해체 청년고용

동일노동동일임금 기본소득 재생에너지

탈삼성 일자리나누기 4대강복원 **로컬푸드**

무상의료 자립생활 생활임금 이동권보장

녹색GDP 전태일의집 유기농혁명 토빈세

국공립대학네트워크 노동허가제 **탈핵**

탄소세 가족구성권 참여예산 이명박처벌

노동시간단축 정의로운전환

노사공동결정 톨레랑스 도시농업 **사회주택**

노후안심 대중교통 남북에너지협력 공영카드회사

안전한작업장 금융자본규제 OCCUPY

사회적경제 **앙떼르미땅** 동네도서관

3중의 위기와 3중의 대안

3중의 위기		3중의 대안
경제	고삐 풀린 금융 약탈자본주의, 99%의 빈곤	탈자본, 공공성, 연대의 경제
에너지, 기후변화	핵사고, 기후격변, 자원고갈	생태/문화 사회 전환
정치	불통가카, 정당정치 실종, 선출되지 않은 권력 (ex. 삼성)	다양성의 정치, 참여와 소통, 민주주의의 민주화

#1. 총체적 위기, 총체적 아만의 시대

-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가 초래한 국제적 금융위기,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전 세계의 양극화, 성장만능주의의 결과인 지구적 환경파괴의 고통이 가장 취약하고 빈곤한 이들에게 전가되고 있음.
- 용산참사, 쌍용차사태와 같은 비극들은 한국사회가 정글의 야만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적신호.

- 월화수목금금금. 더 많이 일하지만 일할수록 불안하고 가난해지는 한국사회. 그러나 교육과 의료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무책임사회.
- 오키나와보다 서울에서 더 가까운 후쿠시마,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핵위험. 국경을 넘나드는 기후변화의 재앙들. 석유에 기반한 현대문명은 한계점에 와 있음.
- 삼성으로 표상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정치·사회를 장악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데 기존의 정당들은 무기력하거나 무능력으로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2 우리의 삶과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

- 현재의 고통들은 경제 위기, 에너지환경 위기, 정치 위기가 결합된 구조적이고 체제적인 것임을 직시해야 함.
- 또한 이러한 야만적 결과들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삶과 지구라는 터전을 회복불가능하게 무너뜨리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음.
-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지만 빈곤은 확산되는 역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사회는 더 가난해지는 모순.
- 99% 운동에서 확인되는, 도처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지만 기존의 금융, 정치,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는 어디서도 잡히지 않는 위기의 위험상황.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다
위기와 야만의 시대, 삶과 지구가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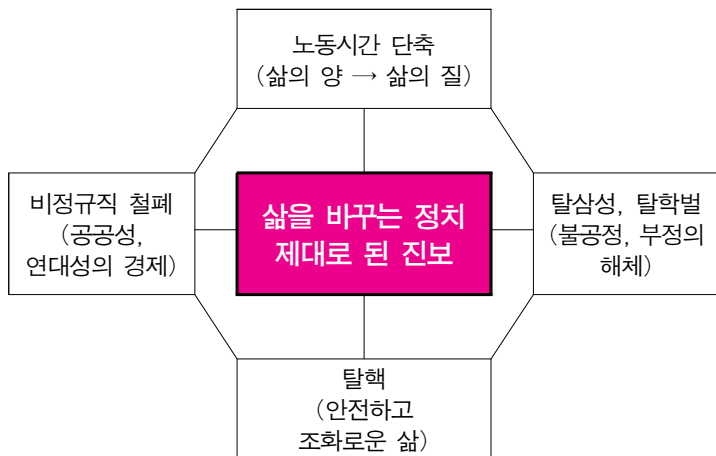
평등하게, 생태적으로, 평화롭게, 연대하며 살기 위한 근본적 변화의 시기
탈출과 전환, 살 만한 세상으로 ESC < 정의 - 전환 - 연대 >

#3. 위기에 필요한 것은 반창고가 아니라 수술이다

- 위기가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만큼 반MB만 외쳐서도, 지나간 정권의 그림자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해결할 수 없다.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고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놔야 함.
- 대량생산 대량소비, 노동과 자연에 대한 착취와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전제하는 과거의 노동복지 체제와, 그것의 단순한 확장인 보편적 복지 구호 역시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대안의 방향은 부분적인 해법을 넘어 기존의 노동체제, 정치체제까지를 대체하는 전반적이며 또한 근본적인 변혁과 전환이어야 함.

#4. 근본 진보, 선명 진보가 답이다

- 현재의 위기가 다중적이듯이, 그 대안 또한 경제적으로 탈자본을 지향하며, 생태 문화사회로의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정치 방식의 변화를 포함해야 함.
- 가장 급진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기에서 진보신당이 표방하는 근본 진보, 선명 진보가 가장 풍부하고 구체적인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음.
- 시급하고 현실적인 요구로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와 금융시장 규제, 탈삼성, 탈핵과 에너지 전환 등을 제시하며 다른 삶, 지속되는 삶, 인간다운 삶을 제안해야 함.



탈탈탈! 한국사회 우리 사회가 벗어나야 할 5가지

1. 탈핵 2030! 한국사회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1) 탈핵 2030 시나리오 실현
- 2) 에너지 절약, 효율화 위한 목표치와 제도 도입
- 3) 재생에너지 대폭 확충,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 4) 남북 비핵 평화 에너지 협력
- 5) 동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의 탈핵연대 협력

2. 탈삼성! 삼성을 노동자·국민 기업으로 전환, '삼성 공화국' 탈피

- 1) 국민연금 소유 지분을 통한 경영의 공적 개입
- 2) 삼성 이사회 1/2 이상을 노동자 선출 이사로 구성

3. 탈비정규직!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의 시작

- 1)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 2)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3)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 4)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확보
- 6) 기업이익분배법 제정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

4. 탈경쟁, 탈학벌 교육 모든 학교를 인간 발달과 협동 중심으로 전환

- 1) 초중등 교육과정 전면 개편으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2) 모든 중, 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2-6-5-4(2) 학제로 개편
- 3)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5. 탈FTA 호혜와 평등의 세계를 향하여

- 1) 한미 FTA를 차기 국회의 의결로 폐기
- 2) 추가 자유무역 협정 추진 중단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호혜무역으로 전환

톡톡톡! 진보신당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할 5가지

6.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로 칼퇴근 명랑사회

- 1)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 2) 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 3) 연간/야근 근로 할증률 인상 및 과세
- 4) 기본 연차 7일 확대 및 연차 휴가 1년 만근 조건 삭제

- 5) 축소된 공휴일 복원 및 대체휴일제 도입

7. 부자증세, 불로소득 중과세로 충분한 복지재원 확보

- 1) MB 감세 조치 철회,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 2) 부동산, 금융 소득 등 불로소득 중과세 도입
- 3) 종교인 과세 등 추가 세원 확보 등으로 총 71조원의 복지재원 확보

8. 주택보급률 100% 시대, 모든 국민에게 집을

- 1) 투기주택 매입(수용) 제도 도입
- 2) 주택대출 국가인수 제도로 하우스 푸어 방지
- 3) 전월세 이율의 소득 연동제로 전월세가 안정화
- 4) 도시개발의 공공적 통제
- 5) 거주자 중심의 주거재생

9. 의료, 고용, 연금 등에서 보편 복지의 확대

- 1) 진료비 상한제로 어떤 질병이라도 1년에 100만 원이면 OK
- 2)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도입
- 3) 청년실업부조로 미취업 청년에게도 고용보험 혜택 제공
- 4)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10.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과 국책 토건사업 재발 방지

- 1) 4대강 사업 관련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 2) 4대강의 모든 보를 철거하여 자연하천으로 복원

- 3) 지역민과 공동으로 팔당유기농단지의 친환경적 보전, 내성천 등 지천 보전
- 4) 강정 해군기지 등 주요 자연파괴, 지역파괴 토건사업의 즉각 중단과 복원
- 5) 대형 개발사업에 사회적 합의제도 도입

탈핵 2030!

한국 사회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현황 및 취지

-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핵에너지 확충을 추진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이명박 정부뿐이며, 유럽 등에서 이미 가시화된 독일식 탈핵 시나리오 돌입이 시급함.
- 2030년을 목표점으로 역산(back-casting)하여 에너지 수요 조절과 에너지 믹스를 재조정하고, 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절약 > 효율화 > 재생에너지 확대 순으로 정책 순위를 가져가고, 이를 달성할 수단을 구체화해야 함.

표_ 주요 핵발전국의 전기소비 및 재생에너지 비율 변화

	1998-2008 전기소비 증가(%)	2000-2008 재생전기 비중 (%)	1998-2008 핵발전 비중 증가	핵발전 정책
독일	5	6.4 → 16	31 → 23	폐기
영국	7	3.5 → 6	29 → 14	거의 포기에서 계속으로
스페인	57	17 → 21	31 → 18	계속
일본	6	거의 변화 없음	36 → 25	계속 (※ 후쿠시마 사고 이전)
한국	90	0 → 1	43 → 36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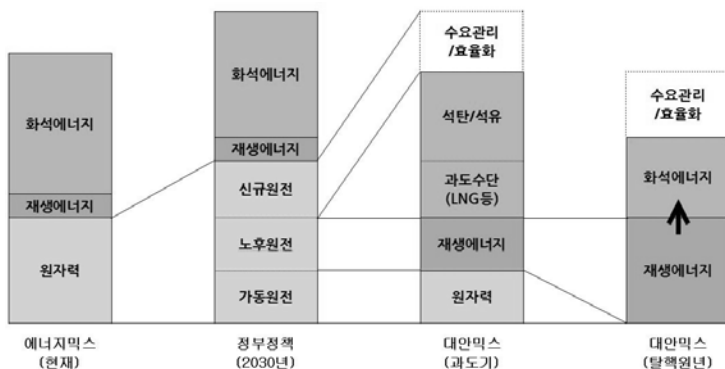
* 이필렬, 「한국에서 에너지전환이 가능한가」(2011) 중 발췌

세부 추진방안

1) 탈핵 2030 시나리오 실현

- 삼척, 영덕 신규부지 선정 철회, 고리 및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건설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 탈핵기본법 제정, 2030년까지 핵발전소 퇴출, 에너지 대체 단계적 실행
- 부적격 부지인 경주 방폐장 건설 중단, 핵폐기물 처리방식 재검토
- 원자력문화재단을 자연에너지재단으로 전환

그림_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 개념 (『탈핵』, 이매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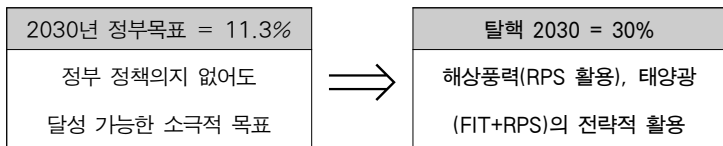
- 현재 총 전력생산 중 31% 가량인 핵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대체, 퇴출시킴
- 신규(예정) 핵발전소 발전량만큼 수요관리/효율화 통해 대체
- 노후 핵발전소 발전량만큼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통해 대체

- 과도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피크시간 대응이 용이하며, 열공급을 함께할 수 있는 LNG 열병합 발전소 증설 (러시아 가스관 도입, 남북한 협력)

표_ 현 가동 핵발전소 수명을 30년 기준으로 할 때 폐쇄 예상과 2030 시나리오 비교

	2010년대	2020년대	2030-34년	2035-39년	2040-44년
폐쇄 발전소	1	9	16	20	1
가동 발전소	20	12	5	1	0
2030 시나리오	2012년 고리, 월성1호기부터 가동중단	단계적 폐쇄 연동하여 에너지 수급 목표 달성	← 2030년 탈핵 실현		

-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연장 가동 없이 폐쇄하고 건설 중인 핵발전소 건설 및 신규 선정을 중단한다고 할 때, 가동수명을 30년으로 하면 2034년까지 3/4이 자동 폐쇄됨.
- 202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 Grid-parity가 도래하여 자발적 보급이 더욱 증가가고, 에너지 효율화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 남은 5기의 발전소도 조기 폐쇄 가능.



2) 에너지 절약, 효율화 위한 목표치와 제도 도입

- 30*4 플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2005년 대비), 전력

소비 30% 감축, 전력 3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

-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혜택 폐지로 에너지다소비산업 효율화 유도
- 에너지 관련세제 통폐합하고 화석에너지에 탄소세 추가 도입
- 대도시 에너지 자립률 법제화, 도시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 (건축물 에너지 등급제 도입과 건축물 개량사업, 대도시 혼잡통행료 확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3) 재생에너지 대폭 확충,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 서남해안 풍력, 동네 태양광에너지 확충 : 발전차액지원제도(TIF) 부활, 재생가능에너지의무할당제(RPS) 요건 강화
- 신축, 증개축 공공건물 재생에너지 의무를 상향(30%로)하고 기존 공공건물도 재생에너지 목표 도입, 민간건물 지붕 임대 태양광 설치 사업
- 에너지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및 지역공동체 피해 방지(고용 연계 재교육, 정의로운 전환 펀드)
- 중소기업, 지역중심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숙련, 금융 지원)

4) 남북 비핵 평화 에너지 협력

-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 부품공장 설립, 북한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러시아 가스관의 평화적 효과적 이용을 위한 남북 공동위원회 설치

5) 동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의 탈핵연대 협력 : 공동 논의/대응기구 구성과 탈핵로드맵 추진

탈삼성! 삼성을 노동자-국민 기업으로 전환 '삼성 공화국' 탈피

현황 및 취지

- 한국 사회 전체로 축수를 뺀 이견희 일가의 권력은 삼성 계열사들에 대한 불법, 편법, 탈법적 지배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권력 기반을 해체해야만 '삼성 공화국'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음.
- 재벌 일가의 권력 기반은 출자총액 제한 등의 부분적 규제책을 선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해체될 수 없음. 재벌 권력의 토대가 되는 주식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전면 개혁해야만 재벌 권력을 해체하고 사회로 환원시킬 수 있음.
- 삼성이 노동자와 국민을 지배하는 '삼성 공화국'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이 삼성을 통제하는 '노동자-국민 기업, 삼성'으로 전환해야 함.
- 탈삼성의 궁극 목표는 단지 재벌 일가의 일부 전횡의 규제나 삼성 그룹의 해체가 아니라 위와 같은 근본적, 종합적 처방을 통해 삼

성 계열사들이 노동자, 소비자, 중소기업, 지역사회와 공생하며 이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에 부응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세부 추진방향

1) 국민연금 소유 지분을 통한 경영의 공적 개입

- 2011년 8월 현재, 국민연금은 약 238조원을 채권에, 약 75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내 거대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로 떠오르고 있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소유 지분이 이미 재벌 일가 지분보다 많음. 2011년 12월 현재,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 소유 지분이 5.17%인 데 반해 국민연금은 5.95%를 소유하고 있음.
- 삼성 계열사들의 지배 주주권을 획득하는 데 드는 준비비용은 약 15조 원. 삼성전자 등에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를 집중하고 경영에 적극 개입한다면, 삼성 계열사들을 국민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우량기업 삼성전자 등에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를 집중. 이견회 일가 소유 지분을 능가하는 지배 지분을 확보.

☞ 국민연금 소유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여 삼성 계열사 경영에 적극 개입.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근로

자 대표 위원,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 공익 대표 위원의 추천 과정을 공개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다 활성화함.

2) 이사회 1/2 이상을 노동자 선출 이사로 구성

- 한국의 주식회사 지배구조는 앵글로색슨 모델의 폐쇄형 이사회 구조를 따르면서 사실상 재벌 일가의 과두적 지배의 온상이 되고 있음.
- 반면 독일 등에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이사회 참여가 보장되며 이들에게 정보가 개방됨. 독일의 공동결정제의 경우, 종업원 2,001인 이상 규모 기업은 '총감독 이사회'와 '경영 이사회'의 이원적 이사회 구조를 취하게 되어 있으며, 노동자평의회가 선출한 노동자 이사가 주주 총회 선출 이사와 동수로 총감독 이사회에 참여함. 경영 이사회는 총감독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여기에도 노동자 선출 이사가 일정 비율로 참여.

☞ 종업원 5,000인 이상 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지배구조 개혁. 노동자가 경영 사안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며 전 종업원이 참가하는 노동자평의회를 설치. 독일식 이원형 이사회 구조를 도입하며, 노동자평의회에서 선출한 노동자 이사가 최소한 주주 총회 선출 이사와 동수가 되게 함.

☞ 노동자 선출 이사 외에도 소비자, 유관업체, 지역사회의 대표가 공익 이사로서 총감독 이사회 수준에서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

탈비정규직!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의 시작

현황 및 취지

- 2011년 8월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86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9.4%를 차지함. 또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1.3,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1.7, 여자 정규직은 66.4, 여자 비정규직은 40.5 정도로 격차가 발생함.
- 전체 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5.1년, 비정규직 평균 근속년수는 2.1년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중 근속년수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중은 56.0%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83~99%에 비해, 비정규직은 32~37% 수준에 불과함.
- 2006년 비정규직법을 제정했지만,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737만 명 → 2007년 861만 명 → 2011년 865만 명으로 큰 변화가 없음. 또한 2006년 법제도의 특징은 차별 시정 및 기간 제한 등

사후 대책 중심의 대책이었으며, 특수고용노동자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음.

- 그 결과, 비정규직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씩 교체사용(회전문 효과)하거나, 기간제 비정규직 대신 사내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증당(풍선효과)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일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축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랜드 파업, 동희오토 파업, KTX 여승무원 파업,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 재능학습지교사 장기 투쟁 등 핵심적 노사갈등이 모두 2006년 비정규직법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초래함

세부 추진방안

1)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입법화 : 임신-출산-병가 휴직 등에 따른 결원대체, 계절적 일자리,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 등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토록 규제하고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근절
- 파견제 폐지: 직접고용 원칙을 훼손하는 파견법 폐지
- 노무 도급 중심의 위장도급 금지 : 적법한 도급과 도급을 가장한

노동력 파견을 구분하여 위장도급에 따른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제

- 정리해고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제한

2)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근로기준법 개정 : 법원의 자의적 판결에 따른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개념을 명확히 규정
- 노동조합법 개정 :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중시한다는 법의 취지를 살려,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까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확대 적용
- 사회보장법 개정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법의 경우 그 대상을 노동자에 엄격히 한정할 경우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해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역행하므로,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의무 적용을 확대, 임의 탈퇴 등 독소 조항을 삭제

3)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 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원칙 적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구성
- 총액인건비제 폐지 및 인력감축 정책 중단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 공공기관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위탁 사업에 대해 업무 위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4)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실시 : 공공기관 또는 특정 규모(예: 1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고용비중 실사를 통해 산업별-규모별로 노사정이 정하는 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에 차별적 고용 관행 및 제도 개선 시정 조치 요구. 시정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정부 조달 사업 및 위탁 사업 입찰에 가점 또는 감점 부여
- 공정임금제 : 정부 및 공기업 위탁 사업 참여 노동자의 임금을 해당 업종, 지역 생활비 등으로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공정 임금 이상으로 책정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확보

-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
- 기간제법 상 차별시정 신청권을 개별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산별노조 포함)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강화

6) 기업이익분배법 제정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

- 기업이익분배법 도입 : 기업이윤의 주주배당이 지난 2년 평균 주주 배당보다 당해 년도 배당액이 많거나, 동종 업계 평균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익배당금에 상응하는 사회보장기금 납부 의무화

※ **프랑스 기업이익분배법** :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지난 2년 동안 지급한 주주 배당액보다 당해 년도 배당액이 많을 경우 이익배당금을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 직책 연봉, 경력에 관계없이 고루 배분되어야 함.

탈경쟁, 탈학벌 교육!

모든 학교를 인간 발달과 협동 중심으로 전환

현황 및 취지

- ‘인간 발달’과 ‘협동’의 교육 철학에 바탕 : 특정 문제들에 대한 대중 요법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 발달’과 ‘협동’의 교육 철학에 입각하여 교육 체계와 내용을 재편
- 교육 과정 ‘전반’의 혁명적 변화 : 교육 과정의 특정 단계만이 아니라 유아 교육에서 고등 교육(대학)에 이르는 교육 과정 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추진
- 한국 사회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 종합적’ 처방 : 공교육 붕괴, 입시 경쟁, 사교육 과열, 등록금 폭등,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학벌 사회 등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종합적 처방을 제시
- 학교 현장의 민주화 : 교육 혁명의 현장인 각급 학교에서 직접 민주주의, 당사자 민주주의를 통해 교육 주체 간 협력에 기초한 교수-학습 공동체 건설

세부 추진방안

1) 초·중·등 교육과정 전면 개편으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교육 목표 : ‘인간 발달’과 ‘공동체적 협동’의 기초(L. S. 비고츠키의 교육 철학에 입각)에 따라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교육 등 각 발달 단계의 교육 목표 제시
- 교수학습 목표 : 학문, 지식 습득의 양적 기준이 아닌 발달 기능 중심 / 개념의 피상적 이해를 넘어서는 진개념(genuine concepts)의 형성을 통한 개념적 사고 기능 발달 / 지성, 정서, 의지의 발달을 전 교과에 공통된 지향으로 설정 (예: 악기 연주 능력 습득은 필수로, 미적분은 선택으로)
- 교수학습 방식 : 집단적 과정과 개별적 과정의 결합 / 새로운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평생 학습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될 ‘학습하는 습관’과 학습의 중요성 및 기쁨을 경험하는 과정 (과도한 양적 부담과 상대 평가로 인한 고통이 반드시 줄어야 함)
- 평가 체제 : 발달적 평가 및 발달기록부
- 교사 : 학생 이해를 위한 관찰과 진단, 처방의 전문가이자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의 주체
-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강화
- 영역 : 교과 영역 / 관심 특기 영역 / 자치 활동 영역
- 물적 토대 : 소인수 학급(교사 1인당 25인 이하) / 수업시수 감축 / 교과 내용 감축
- 시간 편제 : 오전 교과 활동, 오후 관심 특기나 자치. 주당 학습시간은 초등 20-25시간, 중등 기초 26시간, 중등 심화 30시간 정도

(5일제 수업 기준)

- 교과와 분화와 통합 : 초등 단계의 낮은 수준의 분화에서 시작하여 중등 단계에서 점진적 세분화와 아울러 범교과 주제 활동 결합
- 이질적 학습 집단 구성 (수준별, 능력별 집단 편성은 금지)
- 학습 결손 보충 과정 및 학습 장애, 행동 장애, 정서 장애를 포함한 특수 교육 영역에 대해 적극 지원

☞ 이러한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해, 공교육 붕괴 속에서 일부 학교만 혁신학교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드는 교육 혁명을 단행

☞ 그간 ‘핀란드형 교육’, ‘덴마크형 교육’ 등으로 단편적으로 논의되던 교육과정 혁신론을 체계적인 종합 처방으로 제시한 것

☞ 학교 폭력 문제의 근원도 입시 경쟁 교육에 따른 공교육 붕괴에 있는 만큼 이 공약은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근본 처방이기도 함

2) 모든 중, 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 유아 교육을 기본 학제로 포함하고 고교 서열제를 폐지하는 2-6-5-4(2) 학제로 개편

- 유아 교육의 기본 학제 포함 : 만 4-5세 유아들이 다니는 유아 학교를 기본 학제에 포함. 학부모의 양육권 보장 차원에서 의무 교육이 아닌 무상 교육으로 기본 학제에 포함
- 초등 교육과정의 선수 학습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 과정에 조응하는 교육 내용
- 유아 교육 관리는 단일한 국가 기관으로 일원화 (선진국은 교육부에서

관리)

- 중, 고등학교 전환 1단계 : 고교 서열 체제 폐지
 - 입시 기관화되고 상류층 학교로 변질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 학교 선택제를 폐지하고 근거리 배정 제도로 전환
- 중, 고등학교 전환 2단계 : 통합중등학교(중학교 + 고등학교 / 일반계고 + 전문계고)
 -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5년의 통합중등학교로 통합
 - 현재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로 분립된 복선행 학제를 통합중등학교의 단선형 학제로 통합 (현재의 복선행 학제는 전문계고 졸업자들을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군으로 몰아넣는 효과가 있음)
 - 통합중등학교에서 보편적 교양 교육과 직업 교육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발달 교육으로 전환

☞ 건국 이래 큰 변화 없이 지속되던 6-3-3-4(2) 학제, 복선행 학제(인문계고, 전문계고 분립) 등을 최초로 혁명적으로 재편하자는 것

3) 입시 경쟁, 학벌 사회를 뒤엎는 대학 혁명 :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 모든 국공립대를 통합한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으로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대를 대학통합네트워크로 통합. 이를 통해 국립대 법인화 등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편을 중단하고 반대로 공공적 대학 체계 구축
 - 대학통합네트워크 내 지방 캠퍼스에 대한 전략적인 국고 지원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 마련

- 정부의 고등 교육 예산으로 지원 받는 사립대(정부 책임형 사립대)를 중심으로 사립대들을 점차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흡수(=공공화)

- 대학통합네트워크에서 공동 전형, 공동 학위제를 실시하여 입시 경쟁, 대학 서열 체제, 학벌 사회를 점차 해소
 - 신입생 선발 단위는 대학별, 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대학통합네트워크 총 정원으로 함 (공동 선발)
 - 대학 입학 자격은 고교 내신 성적과 계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부여 (수능 폐지)
 - 대입 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먼저 1, 2, 3 지방으로 대학을 지원해 배정받고 거주지별 배정을 원칙으로 함
 - 학점 취득은 대학통합네트워크 내에서 개방
 - 교양과정 이수 후 전공과정에 진학할 때 희망 학과를 지원하도록 하되, 전공별로 학위 수여 정원을 두고 정원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과를 추진 (전공과정 진학 시 특정 캠퍼스에 집중도가 높을 경우 교양과정 이수성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사립대를 지속적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에 결합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교양과정에서 전공과정으로 진학 시 일정 비율을 상호 개방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모든 졸업생에게 전공이 표시된 동일한 공동 학위를 수여하여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
 -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
 - 일반대학원은 학부과정의 성적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구체적

전형방법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전문대학원은 지역균형인재등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일 학구의 학부 출신에게 우선권을 부여

-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 대학통합네트워크 내 대학들의 경우는 입학사정관제, 수준별 수능,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
- 대학입학자격고사를 통과한 학생들에게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 자격 부여 (전기 모집)
- 대학통합네트워크 바깥의 사립대의 경우는 내신 성적과 대학별 고사 등을 통해 자율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입시 공정성 여부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을 강화 (후기 모집)

탈FTA!

호혜와 평등의 세계를 향하여

현황 및 취지

- 한미FTA의 본질은 ‘제도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미국식 시장근본주의를 국내에 이식하는 데 있음. 즉 한미FTA는 단순한 상품의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일국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가의 정책권한을 위축시켜 ‘시장’을 팽창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금융자본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협정임.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개방, 후퇴방지 조항(래칫), 투자자 국가제소제도(ISD), 비위반제소 등 한미FTA 협정문에 가득 찬 독소조항은 사실상 초헌법 역할을 하여 국가의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킨.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킬 산업정책 추진은 물론,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 것임. 따라서 한미FTA는 반복지 정책에 다름 아니다.
- 한미FTA는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잘하는 대기업’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반면 경쟁력 없는 농업, 서비스업 등에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협정임. 또한 농민, 영세상인 등의 몰락을 부추기는 ‘반서민 협정’임. 외국인 투자 증대와 국내 기업 가치 상승 등 수치상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과 서민 소득 악화로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임.

표_ 부자가 본 한미 FTA, 서민이 본 한미 FTA

서민 “집값이 오른다”	vs.	토건자본 강부자 “부동산 거품 지속되다”
정부연구기관도 FTA로 인한 부동산 정책 후퇴 우려 “토지규제를 포함한 모든 공적 규제조치에 대한 분쟁가능성” (국토연구원, 2008)		
서민 “약값도 오른다”	vs.	제약회사 “환자 주머니 사정 관심 없다”
약값 결정에 다국적기업·국내 제약회사 참여 확대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조항’으로 복제약 시판 제한		
서민 “전기세, 가스비, 교통비, 다 오른다”	vs.	투기자본 “오를수록 돈 번다”
한전 등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확대 인정으로 민영화 가속, 공공요금 인상		
농민 “비료값도 안 나온다”	vs.	다국적 농산물 자본 “관세 철폐, 이 날을 기다렸다”
정부 추산 농업 피해 15년간 12조 6,600억 원 양돈협회, “한-미 FTA로 양돈 농가 30% 폐업 예상” 정부조달양허기관에서 지자체 배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대신 ‘어렌쥬’ 나올 판		
중소상인 “대형마트 때문에 죽겠다”	vs.	이마트, 월마트 “저인망 골목 상권 시대 도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상생법(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FTA 장애” (2010. 10)		
노동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못 살겠다”	vs.	투기자본-재벌 “구조조정, 먹튀가 돈 된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한-미 FTA 고용효과는 신기루” (2010. 8) 투기자본의 구조조정(쌍용자동차), 먹튀(론스타)로 실업, 비정규 저임금 노동 양산		

세부 추진방안

- 한미 FTA는 국회의 의결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며 충분히 가능함. 부분적 재협상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효를 거둘 수도 없음.

☞ 민주당 : 11. 22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후, '한미FTA 비준안 무효화' 장외 투쟁 선언 → 12. 20 'ISD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합의 후 등원

☞ 통합진보당 : 12. 20 민주당 등원 결정에 대해 “한미 FTA의 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 국회 등원은 우리의 주권을 예측하고 서민들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일” 비판 → 12. 29 “소수야당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 등원 결정

- 한미FTA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한중FTA 등 추가적인 자유무역 협정도 추진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호혜무역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① 모두가 이익이 되는 정의로운 통상
- ② 인권, 교육, 에너지, 식량 등 필수 공익재는 보호되는 무역
- ③ 국민주권 원리가 침해되지 않는 무역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로 칼퇴근 명랑사회

현황 및 취지

- 연간 노동시간 2,193시간, OECD 최고 : 한국인은 1년에 2,193시간을 일함. OECD 평균 노동시간은 1,749시간. 연간 444시간, 약 2달을 더 일하는 과로사회!!
- 잠 못 자는 한국인 :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중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 이에 비해 프랑스는 8시간 50분, 미국은 8시간 38분, 스페인은 8시간 34분임.
- 잃어버린 휴가, 10일 : 스위스 은행 UBS가 발표한 주요 도시 노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연간 휴가 일수는 12일. 파리(28일), 베를린(28일), 도하(25일)의 절반도 못 채우는 수준
- 과로사회 = 위험사회 : 한국의 산재 사망자 비율은 10만 명당 20.99명!! 두 번째로 높은 멕시코(10명)의 두 배!!

세부 추진방안

1)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특별법 제정
- 노동시간 1,800시간 초과 시 매 200시간 추가마다 노사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
(※ 프랑스는 연간 노동시간 1,605시간 상한. 200시간마다 노사 협의 및 노동부 장관 승인 의무화)
- 주당 초과노동시간 10시간으로 제한
(※ 유럽연합은 주당 초과노동시간 8시간으로 제한)
- 상습 초과 사업장 특별 현장점검 의무화
-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휴일 노동을 연장 근로 제한 시간에서 제외, '탈법적 초과노동'을 인정한 관행 개선
-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 제한 제외 특례 대상을 최소화
- 주당 노동시간 35시간제 도입 추진

2) 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주간 2교대 중심의 교대제 전환 시 전환 지원금 확대
-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야간 업무 규제.

3) 연간/야간 근로 할증률 인상 및 과세

- 사업주의 초과 노동 유인 축소 : 연장/야간 노동 수당 할증률 각각 50%에서 100%로 인상

- 노동자의 초과 노동 유인 축소 : 연장/야간 노동수당에 대해 최고 세율 부과 (현행 최고세율 38%, 진보신당 증세안에 따른 최고세율 50%)
-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현실화로 제조업 야간노동 축소 유도

4) 기본 연차 7일 확대 및 연차 휴가 1년 만근 조건 삭제

- 주40시간제 도입 당시 축소된 휴일 7일을 복원, 기본 휴일을 22일로 확대
(※ 주40시간제 이전 기본 휴일: 월차 12일 + 연차 10일)
- 연차 조건인 1년 만근 규정을 삭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월할부여
(※ 현행법은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년 후 발생할 연차를 앞당겨 쓰는 방식)

5) 축소된 공휴일 복원 및 대체휴일제 도입

- 공휴일 부활 : 한글날(1990년), 식목일(2006년), 제헌절(2008년) 등 축소된 공휴일 부활
- 대체휴일제 :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 도입

부자증세, 불로소득 중과세로 충분한 복지재원 확보

현황 및 취지

-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각종 감세조치로 인한 총 감세규모는 5년간 82.27조 원으로서, 연평균 16.45조 원에 이름. 따라서 MB 감세를 철회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16.45조 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이후의 세수 확보 규모는 17조 원을 넘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우리나라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소득공제 등 각종 조세감면 조치들은 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집중될 뿐 아니라 조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가능하면 억제해야 함.
- 아울러 주식 양도차익 과세, 파생상품 거래세를 제대로 징수하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MB 감세 이전인 2008년 세율로 환원시키고 감세조치를 철회(단, 부부합산과세는 위험결정으로 반영하지 않음)하는 등 불로소득에 중과세 조치를 실시해야 함.
-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역시 불로소득의 일종임. 현재 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일 때에만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과세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세부 추진방안

1) MB 감세 조치 철회,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각종 감세조치를 철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MB 감세 이전인 2008년도 세율로 환원함(단,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함).
-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함.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과표 3억 원 이상에 적용)을 38%에서 50%로 인상하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과표 200억 원 이상에 적용)을 22%에서 35%로 인상함.
- 대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조치를 대폭 축소하는 등 각종 세액 공제 및 비과세/소득공제 제도 정비를 통해, 조세지출규모를 현재보다 10% 축소함으로써 국세감면율을 현재의 13.70%에서 12.33%대로 낮춤.

표_ 개정 소득세율 안

과세표준	2008년도 세율	현행 세율	개정안
1200만원 이하	8%	6%	6%
1200만원 ~4600만원	96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7%)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7%)
4600만원 ~8800만원	674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6%)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650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26%)
8800만원 ~3억원	176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742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3억원 초과	176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901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35%)	916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50%)

표_ 개정 법인세율 안

과세표준	2008년도 세율	현행 세율	개정안
2억원 이하	13%(1억원이하)	10%	10%
2억원 ~200억원	13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5%)	20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20%)	20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25%)
200억원 초과	13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5%)	39억80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22%)	49억74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35%)

- 이상의 부자 증세, 대기업 증세 조치를 통해 늘어나는 순세수 증가분은 대략 17.44조 원 정도이며 MB 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 증가분 16.45조 원을 합치면 총 33.89조 원 가량의 재원이 확보됨

2) 불로소득 중과세 도입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그 대신 현행의 주식거래세는 폐지함. 또한 현재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커녕 거래세조차 과세되지 않는 바(전면 비과세),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단 거래세를 도입함.
- 종합부동산세는 MB 감세 조치의 일환으로 세율이 인하되었는 바, MB 감세 이전인 2008년 세율로 환원시키고 (단, 부부합산과세는 위험결정으로 반영하지 않음), 과표를 공시가격의 80%만 잡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00% 과세함. 재산세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함.
- 현재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4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을 때에만 종합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종합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함.

※ 세수 추계

-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액은 대략 7.41조 원이나 (세율 20% 적용) 주식 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액 3.66조 원을 제외한 순세수 증가액은 대략 3.74조 원임.
- 한편 파생상품거래세의 경우, 파생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세율을 현행 주식거래세 세율의 100분의 6인 0.03%로 함 (통합민주당의 안은 0.01%임). 이에 따른 순세수 증가액은 대략 3.33조 원임.
- 종합부동산세 세율 환원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MB 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 증가분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에 따른 순세수 증가분만 반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순세수 증가분은 대략 3.60조 원임.

-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에 연동되므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수도 증가함. 이에 따른 순세수 증가분은 대략 3.82조 원임.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 증가분은 대략 0.79조 원으로 추정됨.
- 지금까지의 세수 증가액을 모두 합산하면 (MB 감세 철회 및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조세지출 축소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액까지 모두 포함), 전체적인 세수 증가액은 대략 49.17조 원에 이름.
- 또한 이외에도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및 미술품과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추가 세수증가액(현재로서는 세수를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우나 일단 0.5조 원 정도로 추정)을 감안한다면 총 세수증가액은 대략 49.6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주택보급률 100% 시대

모든 국민에게 집을

현황 및 취지

- 현재 정부와 보수야당의 주택정책은 기존의 주택정책을 보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주택을 ‘투기판’에서 빼내오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택공급률이 올라가도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세입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우스 푸어’를 양산시키게 됨.
- 공급을 중심에 놓는 주택정책은 이제 뒤로 물러나야 함. 기존 주택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고, 멀쩡한 집을 고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함.
-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7년부터 100%를 넘어섰으며, 산술적으로 모든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의 총량은 공급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 주택불균형의 가장 핵심은 공급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체계에 있음. 헌법과 법률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을 적정가에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주택의 '분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용산참사는 6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불도저식 도시개발 사업의 종말을 알리는 시대적 징후였음. 무엇보다 도시개발의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되어야 하고, 주거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한편 대책이 없는 강제철거가 금지되어야 함.

세부 추진방안

1) 투기주택 매입(수용) 제도 도입

-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통계조사 및 세무조사 즉각 실시
- (단기) 비 자가주거 주택에 대한 수용계획 마련 및 법 개정
- '공토법' 상의 '비주거용 주택의 수용 절차' 명시
- '임대주택법' 상에 수용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관리 방안 명시

☞ 수도권외 중소형 주택 우선, 1호당 공시지가 기준 2억 5천만 원 편성

☞ 국민주택기금 우선 활용, 국민연금 투자계획에 반영

2) 주택대출 국가인수 제도로 하우스 푸어 방지

- 무주택자의 주택대출을 우선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매입하여 공공대출로 전환
- 자가 소유자의 경우, 대출비율이 집값의 50%를 상회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대출을 인수하여 사회주택으로 전환 유도

- 장기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제도를 정책금융으로 일원화하여 공공 관리 강화
- ‘주택대출인수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주택대출에 대한 공공인수의 근거를 마련함.
- 현재의 주택금융공사를 신용보증 기능보다는 직접 지원 기능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신규 건설되는 주택청을 통해 사회 주택과의 연계성을 강화함.
- 주택대출 인수채권을 발행.
- 주택대출 주택의 사회주택화를 통한 자산화로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3) 전월세 이월의 소득 연동제로 전월세가 안정화

-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한 해 동안만, 총 3차례의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으나 사실상 실패하였음. 이는 공급물량 확대와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실효성이 낮은 대책이었기 때문임.
- 진보신당은 이런 전월세와 관련하여, 이를 ‘전년 연동제’가 아니라 ‘소득연동제’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함.

-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 중소형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전세자금 대출조건 완화(무주택조건 폐지)
- 211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전세자금 지원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한도 상향 조정(금리 인하 등)

- 818 전월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 :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면세, 주택재개발 사업시기 조정, 임차인의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소득분위별 가구 소득 변동률에 기반한 전월세 상한기준 마련
- 1가구 10가구 이상자에 대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 ‘임대주택법’ 상에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등록 규정 명시
- ‘주택법’ 상에 소득 연동형 전월세 상한제 실시에 대한 근거 마련

4) 도시개발의 공공적 통제

-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여 전면 재조사를 실시함.
- 용산참사 재발 방지 법안을 목록화하여 일괄 발의, 제정하는 형태로 용산참사의 후속조치 완료
- ‘도시개발법’ 개정 : 모든 도시개발의 공공 통제 강화, 선 대책 후 사업추진의 원칙 명시
-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 실거주자의 동의 없는 주택의 퇴거 조치 및 철거를 원천적으로 금지함.

5) 거주자 중심의 주거재생 : ‘주거관리형 주택개선사업 강화’

-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거지재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주택법’ 개정 : 주거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에너지효율화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

- ‘주거지재생법’ 제정: 기존의 정비사업에 포괄되지 않는 제3섹터 방식의 주거지재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물리적 개량과 사회적 인프라 지원에 대한 명시

의료, 고용, 연금 등에서 보편 복지의 확대

현황 및 취지

- 현 복지 제도는 가장 가난한 계층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나머지 복지”로 조건이 까다로워 수백만에 이르는 실질적인 빈곤층이 아무 혜택도 못 받으며,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해서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복지 수혜층이 빈곤을 탈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 구시대적 제도(선별적 최소 복지)로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발생하는 삶의 위기에 대응하지 못함. 선별적인 최소제공 복지로는 아무것도 해결 못하며, 부동산, 금융, 교육, 소득 불평등이 모든 세대에 걸쳐 더욱 크게 일어나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삶”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 세대에게도 이어지는 “빈곤과 위기의 삶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임.
- 보편적 복지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특히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에듀 푸어 등 생활형 빈곤을 해소하고, 계층 간 및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요인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임.

세부 추진방안

1) 진료비 상한제 : 어떤 질병이라도 1년에 100만 원이면 OK

- 질병에 걸린 환자가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를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의료비는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
-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급여(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여 환자의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급여(건강보험적용 대상)로 편입.
-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하나하나마다 돈을 지불해 주는 방식(행위별 지불보상제도, 행위별 수가제도)을 질병별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지불하는 방식(포괄적 지불보상제도, 질병당 수가제)으로 전환.
- 질병 자체보다도 환자에 중점을 두고 예방과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주치의 제도 도입.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

2)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자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또한 재취업 혹은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참여를 지원함.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경제활동으로 인한 질병, 부상을 고용형태(노동자냐 아니냐)에 따라 차별하는 현재의 산재보험을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확대 개편.
- 고용보험 수급 자격 완화 : 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자발적 실업자 급여 수급 제한을 없앴

3) 청년실업부조 : 미취업 청년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와 신규실업자(청년)를 대상으로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실업자에게 최저임금 90%의 고용연대 급여 지급

4) 노인기초연금

- 비정규직을 포함해 연금 미가입 저소득층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 기초노령연금은 현행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5%인 급여액(월 1인 91,200원, 부부 145,900원)을 월 25만 원 수준으로 인상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과 국책 토건사업 재발 방지

현황 및 취지

- 4대강 사업은 영원히 준공되지 않을, 아직도 목적이 불분명하고 온갖 역효과만 낳는 엄청난 범죄행위임.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환경보전 등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이유들은 모두 근거가 없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모래가 채퇴적되고 보의 균열과 누수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4대강 사업은 한반도대운하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명칭과 내용을 위장하여 추진하면서 온갖 편법과 탈법을 수반했을 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검토도 거치지 않았음. 때문에 이 사업은 단지 '정책적 판단'이나 오류의 문제가 아닌 국정문란과 국토파괴 행위로 규정되어야 함.
- 차기 정부부터 4대강 복원이 큰 과제가 되겠지만, 이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반드시 가혹하게 처벌해야 함. 한반도대운하 때부터 이를 입안하고 정책논리를 제공하

고 선전에 동참한 이들을 모두 조사해서 처리해야 함.

- 아울러 새만금, 평택미군기지, 강정해군기지,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등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실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 사전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함.

세부 추진방안

- 4대강 특별법(진상규명, 복원 시행 근거) 제정하여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사업입안과 주도, 상위법령 위반과 편법,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 등)에 대한 조사와 복원 방안 마련
- 4대강 사업 관련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 한강부터 잠실과 신곡 수중보를 헐고 4대강의 16개의 불필요한 보를 철거하여 자연 침식과 퇴적을 유도함으로써 모두 독일 이자(Isar)강 모델로 복원.
- 지역민과 공동으로 팔당유기농단지의 친환경적 보전, 내성천 등 지천 보전
- 주요 자연과괴, 지역과괴 토건사업의 즉각 중단과 복원
 - 강정마을 해군기지 중단, 생태 복원
 -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하고 서해안 갯벌벨트 복원, 지역어민 보호 프로그램 시행
 - 삼척,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 선정 철회
- 대형 개발사업에 사회적 합의제도(네덜란드 PKB모델) 도입

※ 네덜란드의 PKB(Key Planning Decision)는 국가의 도로사업이나

토지이용, 주택건설 등 국토개발 사업에 있어 내각, 의회, 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수립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는 초기 보고서를 말함. 지방정부가 상세히 수립하는 국토개발계획은 모두 PKB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개발계획이 정부뿐 아니라 사회적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립됨.

분야별 정책과제

정치

행정자치

평화/외교

사법

인권

경제/금융

조세/재정

건설/교통

농업

노동

복지

주거

보건

에너지/환경

교육

문화

미디어/정보통신

과학기술

여성

청소년

청년

장애인

소수자

정치

사회 대전환을 위한 정치 대수술

전면적 비례대표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책임 강화! 시민은 의회활동 참여 확대!
교섭단체 폐지로 의회민주주의 활성화
국민 참정권을 국제 수준으로 보장
국정문란 사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국민들의 삶과 가장 무관해진 한국 정치

정치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함에도, 한국의 정치는 국민들과 가장 멀고 국민들의 삶과 가장 무관한, 힘 있는 이들의 나눠 먹기의 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선출된 대통령에도 국회에도 하소연할 바 없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은 지금의 대의 정치가 허울뿐인 제도임을 웅변했습니다. 핵발전 정책에서, 강정 해군기지에서, 최저임금 결정과 복지대상자 선정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길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년 혹은 4년마다 몇 주씩만 유권자라는 이름으로 정치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이 상황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보수 양당 체제를 고착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정면으로 고발하고 보수 정치의 카르텔을 극복하려는 진보정당의 존재는 가진 자들이 만든 정치 제도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은 ‘불통가카’를 만들었고,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은 매번 담합과 날치기를 반복하며 국민의 관심과는 전혀 무관한 무능한 국회를 낳았습니다. 교원과 공무원의 참정권이 여전히 낡은 법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과도한 기탁금과 근거 없는 정치참여 연령 제한, 주민과 밀착하는 지역 정치활동을 엮매는 정치관계법도 고쳐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나 정치의 주체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결과적으로 왜곡하고, 정치 여론과 현실 정치세력 분포를 괴리시키는 낡은 정치제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진보정치가 도약하도록 연합정치를 활성화하고, 민의의 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보수 양당 중심의 국회 운영을 견제하도록, 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회활동 참여 통로를 더욱 넓게 확보하고, 의회로 제한되지 않는 참여 수단들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나 정치의 주체이고, 모든 정치인들이 언제나 심판받고 교체될 수 있는 정치,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공약 :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정치 제도 대수술

1. 소선거구제 폐지! 전면적 비례대표제!
2.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3.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책임 강화! 시민은 의회활동 참여 확대!
4.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정당 및 임기 중 사퇴 선출공직자의 책임 강화

5. 연합 정치의 법적 보장을 위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
6.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 강화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력 강화
7. 교섭단체 폐지로 의회민주주의 활성화
8. 국민 참정권을 국제 수준으로 보장
9. 국정문란 사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행정자치

권한, 자원, 책임의 실효 있는 지방 분권

행정에 주민참여 강화

지방재정 독립성 강화

실질적 분권화 추진

공기업 경영평가 전면 혁신

지방세에 부자감세 방지



책임회피형 지방분권, 신종 관치의 폐해 점증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지방자치야말로 지역의 고유성과 시민들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핵심적인 의제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의 확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실시된 지방분권은 권한을 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지방정부에 이행하는 책임회피형 지방분권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2005년 지방사무이양은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권리를 지방정부에 일괄 위양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피상적인 지방분권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부자감세가 사실상 지방정부의 중속성을 강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세감면율에 비해 지방세감면율은 두 배 이상 높은데, 이는 중앙정부가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지방세를 편의적으로 감면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민간기업과는 다른 설립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간기업과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현행 공공기관평가제도는, 사실상 공공부문의 노동조건 불안 및 대시민 공공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밀어붙인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해임과 김정현 문화예술위원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과 같은 ‘신종 관치’의 도구로 전략하였습니다.

세계화에 저항하는 주민의 지방공동체를

진보신당은 현행 지방분권제도가 독립적인 재원의 보장, 균형 잡힌 사무의 이양, 그리고 자체적인 책임성의 강화라는 3가지 정책방향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분권으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진보신당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주민에 의한 지방공동체를 꿈꾸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고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공약 : 주민 참여와 분권화로 연대와 공존 틀거리 만들기

1. 행정에 주민참여 강화
 - 주민참여기본법 제정
 - 참여예산 및 참여행정의 실효성 향상
2. 지방재정 독립성 강화
 -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상향
 - 지방이양사무 재환수
3. 실질적 분권화 추진
 - 행정안전부 축소
 - 지방행정청 설치하여 지방분권 지원

- 총액인건비 제도 전면 재정비

4. 공기업 경영평가 전면 혁신

- 경영평가 대신 운영평가 중심으로 재편
- 경영에 노동자 및 시민참여 보장

5. 지방세에 부자감세 방지

- 지방세 감면 의무협의제도
- 지방세 연동 교부제도 도입

평화/외교

한반도의 영속적 평화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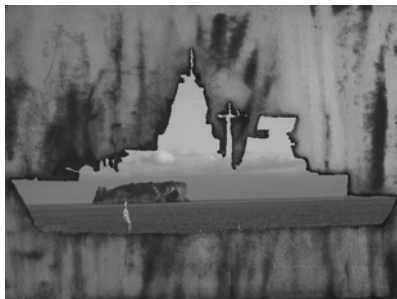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중단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상호군축 선도와 대체복무제 개선

미국과의 군사적 합의 재검토와 부당한 협정 개폐

녹색평화외교 추진



평화를 책임지지 못하는 나쁜 정부

평화는 모든 삶의 전제 조건입니다. 평화를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평화에 대해 너무도 무지했고, 남북한 사이의 불필요한 긴장만 유발해 왔습니다.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활용될 군사기지입니다. 구럼비 바위를 깨고 사람들을 끌어내면서 강행되는 폭거는 범죄행위임에 분명합니다. 한국만의 평화 비전과 구상 없이 한미 동맹 위주의 군사전략에 매달려 온 한 결과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가장 큰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이지만, 그럴수록 해법은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북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영속적인 평화여야 합니다.

녹색, 평화의 책무 다하는 외교로 전환

이제는 군이 왜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안보’라는 단어 뒤에 가려졌던 폭력과 억압을 낱낱이 직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군대의 존재 형태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만의 경제성장, 한국만의 발전을 위한 외교는 궁극적으로 한국민의 안위도, 지속가능한 지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을 수출하고 ‘국격’을 운운하는 허장성세 대외과시용 외교

를 그만두고, 진정한 녹색과 평화를 위한 외교와 국제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공약 : 남과 북이 함께 누리는 안전과 평화, 이를 위한 연대

1.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중단

-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
- 구럼비 바위 생태 복원, 평화의 지역 공동체 복원

2.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핵무기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의 새로운 일괄 타결 추진
- 서해상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 설정
- 재생에너지를 통한 남북의 에너지 평화 협력 프로젝트

3. 남북 상호군축 선도와 대체복무제 개선

-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 상호군축 추진
- 방어적 무기체계로 전환, '방어적 방위' 원칙 확립.
- 대체복무제도 확대, 모병제 전환 준비

4. 미국과의 군사적 합의 재검토와 부당한 협정 개폐

-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무효화
- 방위비 분담금 삭감과 한미 양국의 불평등한 협정 및 조약 개폐

5. 녹색평화외교 추진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국제적 연계
- 전지구적 핵군축과 군비통제 조약들의 준수 국제 연대

사법

법치의 완성, 정의가 숨 쉬는 사회를

악법철폐, 기본권의 보장

검찰 제자리 찾아주기, 검찰권력 해체

헌법소원 주권자배심제

로스쿨 폐지 및 변호사시험제도 재설계

범조유사직역 전문가에게 소송대리인 권한 부여

소득수준에 따른 일수벌금제 도입

언론자유를 위한 형법 개정



악법의 존재, 검찰의 전횡, 퇴보하는 사법개혁

헌법 위의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박탈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사형제 역시 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권력독점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임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특히 현 정권 내내 추진했던 검찰개혁 논의는 거의 유명무실화된 상태입니다.

사법민주화는 그 당위에 비추어 진척의 정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특히 소위 ‘도가니’ 사건 및 ‘부러진 화살’ 사건 등으로 인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법개혁 중 상당한 내용들이 그 의미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제도는 시행된 지 3년 만에 이미 그 효용을 의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보다 민주적인 법제, 보다 민주적인 사법을 통한 정의의 회복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검찰구조를 혁신하고 올바른 검

찰의 지위를 찾아줌으로써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의 심리와 평결에 시민 배심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사법민주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으면서 사회적으로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는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시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법조인력 충원 구조를 근본부터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조 유사직역의 전문가들에게 소송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공판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리고 실질적으로 법조인을 대폭 늘리는 효과를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약 : 사법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법치주의의 완성

1. 악법 철폐 및 사형제 폐지

-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사형제 폐지

2. 검찰에게 제자리 찾아주기

- 검찰과 법무부의 실질적 분리, 검찰체계 이원화
- 중수부 및 공안부 폐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검찰 감시 시민 옴부즈맨 제도 및 업적평가공개 제도 도입

3. 헌법소원 시민배심제 도입

4. 로스쿨 폐지 및 변호사 시험제도 재설계

-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폐지하고 법학부를 정상화
- 일정 수준의 응시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도록 변호사시험 변경

5. 법조유사직역 변론참여

- 법무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로 하여금 법정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보장

6. 소득수준에 따른 일수벌금제 도입

7. 언론자유를 위한 형법 개정

인권

삶의 정치, 인권의 정치를!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

이주민/난민 인권보장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보장



차별과 박해가 조장되고 용인되는 상황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우려할 정도로 축소되면서 차별철폐를 위한 국가적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현실을 극복하고 관계의 정치로 이어지는 인권정책

무엇보다도 현 정권 들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차별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법제를 신속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소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중점을 두어 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민/난민 및 HIV/AIDS 감염인 등 배제되고 잊힌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공약 :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
-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세상

1. 모든 차별의 철폐

-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2.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장

- 동반자법 제정
-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 성소수자에 대한 의료권 및 주거권 보장

3. 이주민/ 난민의 보호와 권리보장

-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성
-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보장
- 적정한 다문화정책 수립
- 난민인정 및 수용확대

4.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보호

- 감염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수립
- 감염인 노동권 보장
- 감염인 출입국 자유 보장
- 강제검사 등 차별 금지

경제/금융

금융자본 규제, 경제 공공성 강화

금융개혁 : 나사 풀린 금융자본 길들이기

시장개혁 : 함께 번영하는 공존의 경제

재벌개혁 : 그들이 말하지 않는 3가지

민생개혁 : 지갑은 무겁게, 소비는 가볍게!



한국의 경제 상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바로 1980년대 런던과 뉴욕의 금융가에서 생겨난 금융자본주의라는 기형적 경제체제입니다. 금융위기 발발 후 가공의 신용을 담보로 한 금융자본의 거품이 터지면서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는 막대한 연쇄적 타격을 입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선진국들은 경제의 재편(Rebalancing)을 외치며, 고부가가치 창출형 실물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생상품 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 역시 경제의 재편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기회의 평등조차 철저히 무시당했던 재벌중심 약탈경제의 악습을 이제는 바로잡을 때입니다. 1993년 문민정부 시절부터 2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시혜성 미봉책으로 일관하여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정체시킨 여야 2당은 집권 정부로서 실격입니다.

오늘날 국내 경제가 OECD 10위, 수출 8위, 무역규모 8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것은 50여 년 동안 서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정작 보상받아야 할 서민들은 OECD 불평등 지수 20위라는 우울한 결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본 정책방향

우리 경제는 키코(Kiko) 등 악성 파생상품들에 기인한 연쇄적 파산과 해외기업의 선물 주가 조작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국민경제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끄는 유일한 개혁 통로는 금융자본의 규제를 발판 삼아 실물경제의 재편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기업 경쟁의 틀을 재편하고 공존/공영의 경제를 이루어야 할 시점입니다. 중소기업 안정화와 자영업의 건강한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민 가게에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입니다. 통신비와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이 요구됩니다.

공약 : 2012년을 한국경제 리빌딩의 원년으로

1. 금융개혁 : 나사 풀린 금융자본 길들이기
 - 금융 합리화 :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 금융 안정화 : 금융리스크 관리기금 조성
 - 금융 투명화 : 금융범죄 감시망의 대대적 혁신

2. 시장개혁 : 함께 번영하는 공존의 경제

- 중소기업 전문화 : 21세기 신성장산업 10종을 중소기업 육성업종으로 지정
- 중소기업 안정화 : 협동조합 네트워크 개발을 통한 중장기적 번영
- 소상공업 안정화 : 자영업을 건강하게 다이어트 시키기

3 재벌개혁 : 그들이 말하지 않는 3가지

- 재벌을 규제하면, 기업경영이 절로 민주화 된다? Not Really.

진보신당의 답 : 단일이사회제도 폐지 → 이원적 이사회 제도 도입

- 재벌을 규제하면, 재벌 독점 구조가 해체된다? Not Really.

진보신당의 답 : 노사공동결정 시스템 구축

- 재벌을 규제하면, 건강한 투자가 늘어난다? Not Really.

진보신당의 답 : 장기적 투자 전략을 위한 금융 산업 협력시스템 구축

4. 민생개혁 : 서민들의 통신비와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절감

- 통신비 절감 : KT를 공기업으로! 이동통신산업 혁신
- 카드수수료 절감 : 수수료 0% 공영카드회사 설립 + SSM허가제 연내처리

조세/재정

부자 증세로 충분한 복지재원 마련

MB 감세 철회,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주식양도소득세 및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종합부동산세 강화

종교인에 대한 과세, 종교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강화



증세 없는 복지국가는 사기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재정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31.2%이고 (309.1조 원) OECD 평균은 49.0% 정도입니다. 이는 결국 현재의 재정규모를 60% 가량 증가시켜야 OECD 평균에 도달한다는 것이며 세입과 지출이 모두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공복지 관련 지출(각종 사회보장 포함)은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재정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28.2%인데(92.0조 원) OECD 대부분의 국가는 50~60% 수준이며 20%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이 공공복지 관련 지출의 상당수는 연금 등 고정된 지출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출은 매우 미약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공공복지 관련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하며, 이에 따라 재정규모도 늘어나므로 기존 예산 순위의 재조정이나 조세투명성 확보 등을 통한 세입 증대 외에 증세를 통한 세입 증대가 불가피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국가는 사기이며 다만 누구에게 증세의 주된 부담을 지울 것인가가 문제일 뿐입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복지 재원 책임져야

49.67조 원 규모의 증세(MB감세 철회, 부자 증세, 불로소득 증과 세)와 3.50조 원 규모의 재정투명성 확보(탈루소득 과세)를 통해 현재의 재정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토건 예산의 대폭 축소 등 기존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함으로써 18.16조 원 가량

을 복지 관련 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대략 71.33조 원 가량을 복지 관련 지출(보건 및 고용 관련 지출 포함)을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49.67조 원 규모의 증세액의 주된 부담은 부자와 대기업이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주식 양도차익 및 파생상품 거래 등의 자본이득, 부동산에 의한 자산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은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번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불로소득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규 세제 도입 및 기존 세제 강화, 종합과세 적용 등으로 중과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자 증세, 불로소득 중과세'가 확실히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로, 각종 소득공제나 비과세 조치 축소 등 일정 규모의 보편 증세도 수용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복지 관련 지출이 대폭 확대된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약 : 부자는 부자다운 세금을, 불로소득은 더 많은 세금을

1. 부자증세로 복지재원 확충

-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조치를 철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MB 감세 이전인 2008년도 세율로 환원
-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치 대폭 축소하고 각종 세액공제 및 비과세/소득공제 제도 정비

2. 불로소득 중과세

-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현행 주식거래세는 폐지
- 종합부동산세를 MB 감세 이전인 2008년 세율로 환원, 과표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100% 과세. 재산세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폐지
-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

3. 종교인에 대한 과세, 종교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정교 분리 원칙 엄격 적용

- 종교의 교직자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전면 과세
- 종교법인법을 제정하여, 종교단체가 회계 투명성을 확보했을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 유지

건설/교통

4대강은 물고기와 새들에게,
4대강 주변은 감옥으로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녹색교통
4대강사업 중단, 책임자처벌 및 자연하천 복원과 토건범죄 재발 방지
국토부 등 개발집단 권력 해체, 환경관련 부처 강화로 녹색정부 구현



도로, 토건족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과 공공성

한국의 교통은 꾸준한 시설 투자로 지속적 확장세에 있지만, 승용차 중심 도로 위주 투자로 인해 에너지와 자원 다소비를 유발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국가가 철도 투자에 미온적이었고, 연계교통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더욱 하락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맞아 국토와 건물의 효과적인 대응 체제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허울뿐인 녹색성장은 환경 위기 대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환경 파괴만을 가속해 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무분별한 토건 국토개발과 토건 정부의 폐해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에 써야 할 돈을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쏟아붓고, 부정과 부패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KTX 사유화 도입, 친수구역법 제정에서 보듯 자연과 공공자원의 사유화와 공공성 후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과 주거 등 필수적 인프라의 보편적 이용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녹색교통, 조화로운 국토 이용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녹색교통을 모든

계층과 지역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세, 대중교통 유인 등을 통한 자동차 통행에 대한 적극적 규제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승용차 이용 저감,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자연 하천으로 복원하는 동시에, 책임자 처벌로 유사 토건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국책사업 추진 시 사회적 합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건교부 등 개발집단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토건국가에서 녹색국가로 나아가는 관건입니다. 환경관련 부처 강화로 녹색정부를 구현해야 합니다.

공약 : 토건세력 해체,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1.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녹색교통
 - 자동차 도로 신설 억제와 철도망의 과감한 확충으로 철도 분담률 대폭 제고
 - 주요 광역시도 대중교통수단의 통합공영화로 무료 마을버스, 하루 1천 원 무제한 환승 실현
 -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와 원격지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실질적 교통이용수단 보장
 - 도로교통량 감축목표, 연비 규제 등 에너지 효율화 목표 법제화
2. 4대강 사업 중단, 책임자처벌 및 자연하천 복원과 토건범죄 재발 방지
 - 4대강 사업 등 주요 토건사업 중단, 복원과 토건 범죄 재발 방지
 -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조화되는 국토계획

- 개발사업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 속에 사회적 합의 제도화

3. 환경관련 부처 강화로 녹색정부 구현

- 국토부 등 개발집단 권력 해체, 환경관련 부서의 통폐합과 권한 강화
- 녹색분권과 녹색거버넌스 증진
- 녹색인지 정책, 예산의 제도화

농업

공존과 생존의 근거지로서의 농촌 재생

식량자급률 법제화, 공공급식 등에서 국내산 수요 창출

로컬푸드, 소규모 친환경 농업 육성

농민소득 보장, 귀농 귀촌 지원으로 안정되고 활력 있는 농촌공동체
재생

농협의 중앙회 폐지하고 본연의 경제사업 중심으로 기능 개편

농지공개념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환경생태 보존효과 증대



농업 자급기반 상실, 위기의 농촌

한국은 주요곡물의 70% 이상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OECD 가입 30개국 중 곡물자급률이 27%에 해당할 정도로 자급기반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농업 기반은 갈수록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농가인구 3백만 명, 농가 1백만 호에 불과할 정도로 농업 인구 자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수입개방과 FTA라는 결정타로 인해 국내 자립농업의 위상이 유명무실화되고, 단지 지원과 구제의 대상 산업으로 격하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남은 농업도 관행농, 기업농 중심으로 석유와 장비에 의존하게 되어, 구제역 등 질병과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형편입니다.

다행히 귀농, 귀촌 희망자, 유기농 농민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 지원은 턱없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전략 부문으로 농업의 위상 확보와 농촌공동체 재생

이제는 에너지 기후 위기 대응의 현장, 국가안보 개념으로 농산물과 농촌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인간답게 일하고 인간답게 쉬는 한국 사회의 실현 공간이자 콘텐츠로서 귀농/귀촌운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국가 공공영역으로서의 농업 역할론을 제기하며, 대농 중심 전업농 정책을 가족중심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본소득 보장과 도농연계를 통한 농촌공동체 살리기가 필요합니다.

공약 : 땅과 식량과 공동체를 지키도록 농민 생활기반 보장

1. 식량자급률 법제화, 공공급식 등에서 국내산 수요 창출
 - 식량자급률 법제화, 50%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
 - 남북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 추진
 - 외국 농수축산물 수입 규제 강화 및 수입 위생검역기준의 법제화
2. 로컬푸드, 소규모 친환경 농업 육성
 - 지역 생산, 지역 소비, '관계'로서의 농업-도시 공동체 실현
 - 도시농업 육성, 지원
 - 농업 생산물/부산물과 에너지 순환 시스템 구축
3. 땅과 식량과 공동체를 지키도록 농민 생활기반 보장
 - 농민 기본소득 지급,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 귀농/귀촌 지원기금 조성, 지원센터 설치
4. 농협의 중앙회 폐지하고 본연의 경제사업 중심으로 기능 개편
 - 농협중앙회가 비사업체로 전환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섹터의 중심체 구실하도록 전환

5. 농지공개념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환경생태 보존효과 증대
- 국가 매입에 의하여 농지공유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 농지농용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계획적 이용 및 보전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

⇒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한미FTA 폐기

노동

탈비정규직, 칼퇴근 명랑사회

노동시간 단축으로 칼퇴근 명랑사회

탈비정규직 명랑 일자리

노동시장 소득 격차 해소

사회연대 노사관계 구축

고용안정망 강화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일자리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노동환경



월화수목금금금, “이게 사는 건가?”

한국인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노동하고, 가장 적게 잠을 잡니다. 가장 많이 일하는 만큼 행복하기는커녕, 가장 높은 산재 사망률과 가장 높은 사교육비, 가장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허덕이게 되는 악무한의 사회입니다. 그나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집단으로 나뉜 가혹한 구조는 두 집단 모두에게 경쟁과 견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86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9.4%에 육박합니다.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 불과하고, 근속연수는 2년에 불과합니다. 사회 전체가 ‘불안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책임이 큼니다. 지난 2006년 비정규직법안이 제정되었음에도,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랜드 파업, 동희오토 파업, KTX 여승무원 파업,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 재능학습지교사 파업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가져왔습니다.

탈 비정규직, 더 좋은 일지리의 시작

진보신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칼퇴근 명량사회’,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의 명확한 제한을 골자로 하는 ‘탈비정규직’ 사회를 제

안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다운 노동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탈비정규직은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의 시작입니다. 한국 기업이 만든 최악의 일자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될 비정규직의 해소를 위해 진보신당이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약 : 인간적인 노동, 인간으로서의 노동자

1. 노동시간 단축으로 칼퇴근 명랑사회 구현
 -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2. 탈비정규직 명랑 일자리 구현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의 규제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3. 노동시장 소득 격차 해소
 - 최저임금 현실화
 - CEO 최고임금제 도입
4. 사회연대 노사관계 구축
 -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 규정 확대
 -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및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3권 및 정치권

보장

5. 고용안정망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급여 수준 현실화
- 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 가입

6.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일자리

7.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노동환경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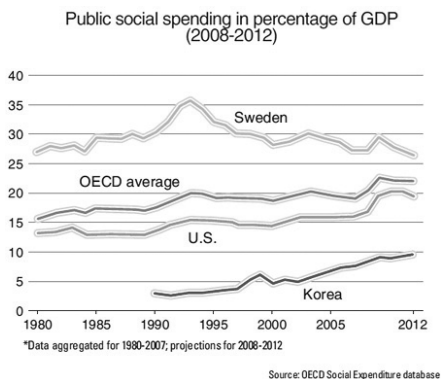
살 만한 삶을 만드는 보편적 복지국가

노후 생활 보장하는 충분한 연금 지급

기초생활보장 현실화

지방이양 복지 사업 평가 후 중앙정부로 환원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빈곤과 위기의 삶 대물림 막아야

현 복지 제도는 가장 가난한 계층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나머지 복지’로, 조건이 까다로워 수백만에 이르는 실질적인 빈곤층이 아무 혜택도 못 받으며,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해서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복지 수혜층이 빈곤을 탈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위기와 재벌 살리기 경제정책은 서민들의 노동위기, 생활위기를 불러 일으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정도 빈곤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주거 빛, 교육 빛 등 생활유지형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마련할 대책이 없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제도(선별적 최소 복지)로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발생하는 삶의 위기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선별적인 최소제공 복지를 지속할 경우, 부동산, 금융, 교육, 소득 불평등이 모든 세대에 걸쳐 더욱 크게 일어나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삶”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게도 이어지는 “빈곤과 위기의 삶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삶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가 아니라면 점차 심각해지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1 : 99의 야만적 약육강식 사회의 도래를 막아야만 합니다.

모두가 '살 만한 나라' 만들기 위한 보편적 복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사람 존중'을 실현하고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가 '살 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빈곤 탈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에듀 푸어 등 생활형 빈곤을 해소해야 하고,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노후 불안 해소 등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창조적이고 연대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공약 :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

1.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충분한 연금 지급
 -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
 - 국민연금은 급여율을 50%, 비정규직을 포함해 저소득층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기초연금의 경우 5% 급여액을 매년 0.5%씩 상향해 2029년에는 15%(약 25만 원)를 지급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

2. 기초생활보장 현실화

-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개편을 통해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여 가구유형별 욕구에 맞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분리하여, 노동에 대한 자기 선택권 부여

3. 지방이양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지방이양사업 평가 후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한 경우 환원

4.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및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 시군구마다 사회서비스(공공)센터를 설립하고 복지분야에서 100만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센터는 복지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의 질과 노동조건 개선

주거

주택보급률 100%시대,
모든 국민에게 집을

집은 사는 사람에게, 투기주택 매입 제도 도입
주택대출 국가인수 제도로 '하우스 푸어' 방지
전월세 이율의 소득 연동제로 전월세가 안정
도시개발의 공공 통제로 용산참사 재발 방지
거주자 중심의 주거재생 추진



자산과 거래의 대상이 아닌 사는 공간으로서의 집

진보신당은 주거의 물리적 조건인 집과 그 곳에 살고 있는 거주자의 권리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주택문제는 집과 그곳에 사는 사람의 불일치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진보신당은 작년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재개발 특별조치법’을 발의함으로써, 기존의 뉴타운 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뉴타운 법이라 불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기존의 법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도시개발 상의 이점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뉴타운 완전폐기와 함께, 집을 집답게 만드는 공약을 새롭게 고민하여 내놓습니다. 진보신당은 이 공약을 통해서 집이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살 곳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 능력에 맞춰 주어지는 사회를 제안합니다.

공급 중심에서 분배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현재 정부와 보수야당의 주택정책은 기존의 주택정책을 보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투기판’에서 빼내오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택공급률이 100%, 200%가 넘어

도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세입자 신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주택정책에 있어 그곳에 사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완전히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집을 얻기 위해 진 빚 때문에 열심히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피폐해진다면 이는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고, 집 있는 사람조차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공급을 중심에 놓는 주택정책은 이제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고, 멸절한 집을 고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공약 : 주거의 공공성 강화, 용산참사 재발 방지

1. 집은 사는 사람에게

- '투기주택 매입(수용) 제도' 도입 : 헌법과 법률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을 적정가에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주택의 '분배'에 적용

2. 주택대출 국가인수 제도 실시

- '하우스 푸어' 방지법 : 가계의 주택대출을 정부가 인수하는 것은, 우선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임과 동시에 가계경제를 건전하게 만드는 제도임.

3. 전월세가 안정방안

- ‘전월세 이율의 소득 연동제’ 도입

4. 용산참사 재발방지 법안

- 도시개발의 공공통제, 강제철거 금지, 선대책 후 사업 추진

5. 거주자 중심의 주거재생

- 주거관리형 주택개선사업 강화

보건의료

국민과 환자, 의료인이 행복한 의료생태 실현

의료비 본인부담 면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관련대학에 무상교육 도입
행위별 수가제도를 포괄적 수가제도로 전환
보험료 면제 제도 도입 및 보험료 부과 합리화
건강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한 의사, 질병으로 파산하는 기계

질병 치료에 드는 돈이 너무 많아 빈곤, 자살, 가정 파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 개인파산 원인의 6.8%는 의료비 때문이며,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의 4%가 의료비 때문입니다. 자살원인의 20.9%가 질병의 고통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보장성이 전혀 확대되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크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국가의 위기대처 능력이 약화되어,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면서도 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가 아니라 돈벌이 기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3시간 대기, 30초 진료 등 기계적인 의료인-환자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강요하는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시장 중심 의료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건강할 수 있는 사회 실현

국민의 높은 건강수준은 학습능력과 잠재력 발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국민들의 노동 역량을 강화해 줍니다. 과도한 치료비 지출을 줄여줌으로써 각 가정이 삶을 풍요롭게 영위할 여유를 줄 수 있

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질병 치료를 가로막는 과도한 본인부담을 없애고,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기술과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낭비적인 가격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30초 진료로 의료인-환자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의료 환경을 개선하며, 건강관리를 강조하는 공공의료제공체계를 확립하며, 의사 등 의료공급자를 사회적인 재원으로 배출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약 : 의료 공공성 강화 통한 무상의료 실현

1. 의료비 본인부담 면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청소년은 본인부담 면제
 - 의료급여 환자,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 폐지.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
2.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 법정 비급여 관리 개선, 비급여 평가 기구 설치
 - 건강보험 적용 병상을 전체 병상의 70%로 확대
3.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관련대학에 무상교육 도입
 - 의료관련 대학에 무상교육 도입하여 의료인력 확충
 -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전체 병상 50% 이상으로 확대

4. 행위별 수가제도를 포괄적 수가제도로 전환

- 현재의 사후보상 시스템에서 사전목표 시스템으로 전환
- 주치의 제도 하 인두제 도입

5. 보험료 부과 합리화 및 기업과 국가 책임 강화

-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직장건강보험 적용
- 보험료 상한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폐지

6. 건강을 중시하는 생활환경과 여건 조성

- 건강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건강친화적인 주거보장
- 미래 세대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 간병, 활동보조, 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연대적 일자리 확대

에너지/환경

탈핵 2030,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탈핵 2030, 녹색에너지 전환

빈곤층 에너지 지원, 주택효율화 사업으로 에너지 기본권 실현
배출권거래제 도입 중단, 목표관리제 강화로 온실가스 실질 감축
녹색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생활공간에서 유해요인 관리 강화, 다양성과 안전성 확보



에너지와 기후변화 위기 동시 대응 시급

한국은 중화학공업 주도 수출 중심 산업구조와 대량소비를 수반하는 급속한 도시화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에 매우 취약해져 있습니다. 한반도 기후변화 속도는 지구 평균의 2배입니다. 한국은 매년 3% 전후의 전력수요 증가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산업 및 에너지 정책도 경제성장을 빌미로 이를 전제/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20년 사이에 도래할 석유폭점(Peak-oil)을 대비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 이상 대안이 아님이 명확해진 핵발전을 대체할 녹색 경제/산업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핵발전소 증설 방침을 고수하고, 이에 대항하는 반핵 및 탈핵 세력의 결집으로 탈핵이 최초로 전국적인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의 현실(에너지빈곤가구 전체의 7.8%, 130만 가구), 대기업과 대도시 위주의 에너지 수급과 이에 따른 갈등(밀양 이치우 노인 분신 사건)에서 보듯, 에너지와 안전은 인권과 계급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나, 러시아 가스관 도입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와 환경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탈핵 2030 충분히 가능하다

2030년까지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로 신규핵발전소를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노후핵발전소를 폐쇄하면 한국 사회에서 탈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전 르네상스'의 환상을 깨고 독일식 탈핵모델로 시급히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이루고, 녹색 경제를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와 에너지 위기에 대하여 시장 의존적 해법이 아닌 실효 있는 규제 제도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녹색 에너지와 환경 복지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남북, 동아시아의 비핵/탈핵 및 재생에너지 공동체를 위한 교류 협력이 필요합니다.

공약 :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1. 탈핵 2030, 녹색에너지 전환

- 2030년까지 노후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충
-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탄소세, 혼잡통행세 등 에너지효율화 제도 도입
-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러시아 가스관 활용 협력으로 비핵/탈핵 남북에너지 평화교류

2. 빈곤층 에너지 지원, 주택효율화 사업으로 에너지 기본권의 보편적 실현

-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 지역 에너지복지와 일자리 창출 연계하는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3. 배출권거래제 도입 중단, 목표관리제 강화로 온실가스 실질 감축

- 배출권거래제 입법 중단, 목표관리제 강화
-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재수립

4. 녹색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 에너지 다소비 사업의 녹색산업 전환 지원
- 지역에 밀착하는 지속가능한 녹색일자리 창출

5. 생활공간에서 유해요인 관리 강화, 다양성과 안전성 확보

- 방사능 물질 등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 생물의 다양성과 존재 권리 자체의 존중 제도화
- 안전하게 노동하고 안전하게 소비하는 생산-유통-소비 체계 보장
- 채식 문화 보호와 보장

교육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초중등 교육과정 및 학제 전면 개편

경쟁과 폭력이 지배하는 교육 현장을 인간 발달과 협동의 공동체로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로 대학 혁명



경쟁과 폭력의 자리에 발달과 협동을

진보신당의 ‘교육 혁명’의 첫 번째 약속은 초중등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으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 현장을 지배하는 ‘경쟁’과 ‘폭력’ 대신 ‘인간 발달’과 ‘협동’의 교육 철학에 입각해 교육 목표, 방식, 평가 체제, 물적 토대 등을 모두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 능력 습득은 필수로, 미적분은 선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핀란드형 교육’, ‘덴마크형 교육’ 식으로 파편적으로 논의되던 교육 혁신론과, 몇몇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실험하던 소극적인 접근을 넘어선 체계적인 종합 처방입니다. 또한 학교 폭력 문제의 근원이 입시 경쟁 교육에 따른 공교육 붕괴에 있다는 점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 처방이기도 합니다.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 학벌 철폐의 교두보

‘교육 혁명’의 두 번째 약속은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학제를 전면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그간 한국 교육을 지배해온 6-3-3-4(2) 학제를 대체할 2-6-5-4(2) 학제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첫째 유아 교육(2년)을 기본 학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며, 둘째 모든 중, 고등학교를 5년 과정의 통합중등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통합중등학교에서는 그간 복선형 학제로 분립되어 있던 인문계고와 전문계고도 하나로 통합되며 이 과정에서 자사고, 외국

어고, 국제고 등은 일반고로 모두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의 ‘교육 혁명’ 공약은 ‘대학 혁명’을 통해 완성됩니다. 모든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공동 전형, 공동 학위제를 실시하여 입시 경쟁, 대학 서열 구조를 점차 해소합니다. 또한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실시합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출발점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에서 더 나아가 대학 무상 교육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밖에도 진보신당은 ▲학교 자치 법제화로 교육 현장 민주화, ▲각급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문대 국공립화, ▲학력 차별 금지법 등을 제시합니다.

공약 : 인간발달과 협동을 위한 교육 복원

1. [교육과정]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초·중·등 교육과정을 ‘인간 발달’과 ‘협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

2. [학제] 모든 중, 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 유아 교육을 기본 학제로 포함하고 고교 서열제, 인문계고-전문계고 분립을 폐지하는 2-6-5-4(2) 학제로 개편

3. [대학] 입시 경쟁, 학벌 사회를 뒤엎는 대학 혁명

: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4.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5. [학교자치] 학교자치 법제화로 교육 현장 민주화
6. [비정규직] 각급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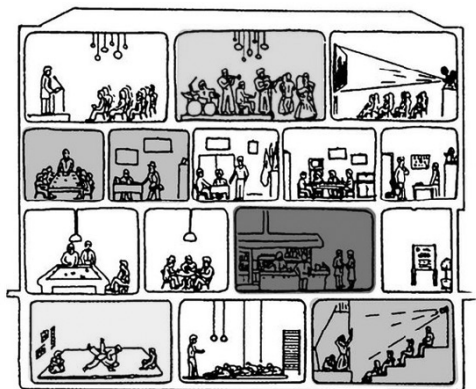
문화

탈성장의 문화사회를 위한 진보적 변화

탈성장 사회로의 문화적 전환

문화산업/자본의 배타성을 넘어선 문화 다양성의 보장

생산자와 향유자의 수평적 연대를 통한 문화공공성 강화



탈성장 사회로의 문화적 전환

진보신당은 강령을 통해서 문화와 예술의 발전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대적 전환의 주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기인 2012년 19대 총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는 세부적인 정책공약을 수립합니다.

우선 ‘탈성장 사회로의 문화적 전환’이라는 방향은, 2012년이 가지는 전환시대의 논리를 ‘탈성장’으로 제시하고 있는 진보신당의 정책방향을 함의합니다.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탈성장은 단순히 성장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서 성장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체제로부터 사람과 사람의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지향의 새로운 사회로 전환을 뜻합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정치집단에서 또 다른 정치집단으로의 권력이양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간 경제 우위의 사회질서가 문화 우위의 사회질서로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이런 전환을 ‘문화사회의 주류화’를 통한 문화적 전환으로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대형 문화산업자본에 의해 포섭된 문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창작자의 영광이었던 영화와 음악은 창작하지 않고 다만 유통할 뿐인 상업자본에 의해 완전히 잠식되었습니다. 창작자의 생산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었던 지적재산권은 다수의 문화향유자를 범법화시키며 약탈적 권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문화진흥

정책은 문화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1, 2차 창작자 대신에 자본화되어 버린 3차 산업자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의 산업화와 자본화 극복

진보신당은 이와 같은 ‘문화의 산업화/자본화’는 결국 문화의 본원적인 의미인 인간 자체의 다수성, 그리고 그것의 표현인 표현의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산업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의해 포섭된 문화는 곧 문화에 대한 보수적 통제와 연결됩니다. 문화의 가치는 이익의 여부를 벗어나, 그것에 관계하는 수많은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문화의 보수화는 문화에 대한 한 가지 시각을 강요합니다. 문화 다양성을 보장할 제도화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정책의 전환은 여전히 부가적인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문화 창작 및 향유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권리로써 실질화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탈성장 사회로의 문화적 전환과 문화적 다양성의 실질화는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시민들의 수평적인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공공성’의 형식과 내용을 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12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복지담론은 여전히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권리가 아니라 시혜의 영역으로 놓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방향의 변화가 없이는 앞서 언급한 어떤 문화적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은 문화 생산자와 향유자의 수평적 연대를 통한 문화공공성 달성을 제안합니다.

공약 : 문화의 다양성, 공공성 통한 탈성장 사회 기반 만들기

1. 탈성장 사회로의 문화적 전환
 - 문화예술생태계의 전면적인 재편
 -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크
 -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정 보장

2. 문화산업/자본의 배타성을 넘어서 문화 다양성의 보장
 - 문화검열 제도/기구의 폐지
 - 네트워크형 문화산업 구조 형성
 - 소비지향 관광정책의 전환
 - 도서정가제 강화로 동네서점 살리기

3. 생산자와 향유자의 수평적 연대를 통한 문화공공성 강화
 - 시민 문화기준선의 마련
 - 문화시설 전문인 제도 수립
 - 도서관의 공공아카이빙 거점화

미디어/정보통신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정보인권 보장

공공성과 보편성이 살아 있는 미디어환경

표현의 자유 보장

프라이버시권 보호

정보의 공정이용 및 정보민주화



자본과 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계속

표현의 자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보가 언제든지 제공되어야 하나, 현행 법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축적된 정보조차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강도를 높여가는 지적재산권 보장은 정보와 지식의 공정한 이용을 방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특히 한미 FTA 등 무역협상 등으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보호되던 최소한의 정보이용권조차 제한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의 소유와 이용한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본은 자본대로 망을 소유권에 기하여 독점하려 하고, 정부는 망 이용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개입하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정이용과 정보민주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공공기관의 정보는 그 공개가 최대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제한사유는 그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 축소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역시 개인들의 정보공개에 관한 요구를 불필요하게 회피하는 관행을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회적인 공정이용을 보장하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러

한 공공성 자체를 부정하는 한미 FTA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도화되지 않은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논쟁의 장에 올려야 하며, 제도적 정비를 시행해야 합니다. 최근 벌어진 삼성과 KT 간의 IPTV 서비스 중단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공정이용과 정보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공약 :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정보인권 보장

1. 공공성과 보편성이 살아 있는 미디어환경

- 정부와 자본의 간섭과 침투에서 자유로운 미디어환경의 개척
- 민주적 참여와 공공성 강화로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여건 보장

2. 표현의 자유 보장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사전심의제 폐지
- 공안기관의 도감청 규제

3.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 주민등록제도 전면 개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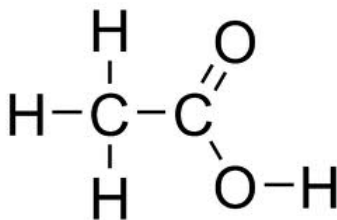
4. 정보의 공정 이용 및 정보민주화

- 정보 접근권 강화 - 정보 민주화

과학기술

민주적이고 공익적인 과학기술

과학의 권력화, 상업화 제어하고 민주성과 공익성 증대
과학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으로 안정된 연구 기반 제공



우리 삶을 위협하는 과학기술의 권력화와 상업화

황우석 사태는 과학기술이 시장화 속에서 비민주, 비윤리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연구소의 시장화 양상은 자연과학을 넘어 이제는 인문사회 과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발전 관련 기술 개발과 정책이 ‘핵마피아’라 불리는 매우 폐쇄적인 카르텔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의 민주화 요구가 매우 긴급함을 보여 줍니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의 실상을 폭로한 김이태 박사 해임 사건,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기도는 정권의 입김이 양심적인 연구의 지반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알려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정부의 고용과 연구 지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연구자들의 처지가 연구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지적재산권의 강화 조처들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과학기술의 공익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개발과 활용의 공익성 증대

과학기술은 누구의 것도 아니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과학자, 기술자들과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함께 만들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발전과 같은 중요한 에너지, 복지 정책에서 과학기술 관련 결정에 시민,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기초과학 증진을 위해 도입된 BK21, WCU 등이 오히려 학문의 시장화와 기업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경향이 저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학종사자의 생존권과 자율성 보장으로 안정된 연구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약 : 소신 있고 안정적인 과학기술자

1. 과학의 권력화, 상업화 제어하고 민주성과 공익성 증대

- 공익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기반 구축
- 출연(연) 지배구조의 일원화와 국과위 위상과 역할 강화
- 무리한 출연(연) 사유화 및 통폐합(단일법인화) 추진 중단

2. 과학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으로 안정된 연구 기반 제공

- 정부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
- 대학원생들의 노동권 확보
- WCU-BK21 사업 폐기하고 대안 계획 수립

여성

2012, 성평등을 향한 사다리 세우기

여성노동의 주변부화를 극복하고 모두가 자립적인 삶
총체적 돌봄의 위기를 넘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성평등한 삶
여성안전권 확보로 건강한 몸, 안전한 삶



재생산과 인력활용 대상에 머물고 있는 여성

현대 산업사회는 여성을 모성의 주체에서 노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여성노동과 여성들의 시민권 확보가 곧 민주적 사회발전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사회는 여성을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재생산과 인력활용의 자원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청년 여성들은 높은 정치의식과 노동시장에서의 기여도에 비해 사회적 지위향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은 여성대표성은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현 시기 한국 사회 여성의 문제를 무엇보다도 총체적 돌봄의 위기, 여성 안전에 대한 전사회적 불안, 여성의 건강불평등 및 몸체에 대한 통제,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노동의 주변화라고 판단합니다.

여성의 생애를 바꾸는 사다리 만들기

일하는 여성, 돌보는 남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야 합니다. 성폭력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조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체육 활동 보장, 산부인과 무상의료 확대, 여성 심야노동 금지로 건강상의 성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굴레로 표상되는 여성노동의 주변화를 막아야 합니다.

여성 내의 소수자 차별도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주거권과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 노령, 이주여성의 시민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삶이 바뀌는 만큼, 남성의 삶도, 한국 사회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공약 : 모든 생애, 모든 집단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

1. 생애별 여성정책 사다리 만들기

- ~19세 : 여성, 건강하고 평등하게 자라다
- 20-30대 : 혼자라도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립하다
- 30-40대 : 일하는 여성, 돌보는 남성이 함께 행복하다
- 40-50대 : 엄마를 벗어나 당당하게 일하다
- 60대~ : 나이 들이 불편하지 않은 삶

2. 다양성과 공존 속에 지속가능한 여성의 생애

- 외국인 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매매혼 근절.
- 장애여성의 평생교육지원법 제정.
- 여성농민의 농업인지위 인정과 전문인력화

3. 모든 여성의 꿈,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 직장과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장치 강화, 대응 기관 확충
- 장애인, 아동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 및 소득보장

4. 여성맞춤 의료체계, 낙태죄 폐지로 여성의 건강한 재생산권 보장
- 화장품, 세제, 생리대의 안전기준 강화.
 - 여성만 겪는 각종 여성질환에 대한 전면적인 의료지원 확대
 - 낙태죄 폐지. 임신, 출산, 낙태, 피임에 대한 의료보험 전면 실시
 - 출산휴가 외에 태아검진, 유사산, 불임 휴가 신설

청소년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정치의 주인으로!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보장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청소년 참정권의 폭넓은 보장



보호의 대상으로 자유의지 자체를 박탈당한 오늘의 청소년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공부하는 기계’, 혹은 ‘주체성을 거세당한 그림자’를 넘어 ‘인간이 아닌 인간’의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중한 입시부담, 과도한 경쟁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나 정작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 인큐베이터 안에서만 존재해야 할 대상으로 보거나 혹은 경쟁구조에 순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즉시 배제시켜 버리는 반인권적 인식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특히 현 정부에서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의 미명을 앞세워 국민 일반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청소년이 마치 성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정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정책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설계는 단지 특정 법률 하나를 개정하는 수준이 아닌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제 사회현상 일체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 연령의 하한을 하향조정하고, 청소년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한편,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니다.

청소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인권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보장과 문화향유권 보장 및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을 필두로 청소년이 진정한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보신당의 청소년 정책입니다.

공약 : 청소년이 인권의 주체로 인정되는 사회

1. 청소년에게 문화향유의 권리 보장
 - 청소년 보호를 빙자하여 자행되는 문화적 규제 폐지
 - 청소년 관련 각종 위원회의 일체 정비 및 기능조정
2.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
 - 청소년 보호법 폐지
 - 청소년 인권에 관한 기본 사항 법제화
3. 청소년을 정치의 주체로
 - 선거권 연령을 만 17세로 하향
 - 피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청년

일자리-주거-스펙프리 청년을 위한

With a little help

노동시간 단축, 공공/녹색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
1인 가구 전세대출 허용 및 1인 가구 공공 주택 확대
대학 서열 해체 및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졸업, 그 막막함

2012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졸업은 막막함입니다. 졸업생 중 바로 구직에 성공하는 이들은 35.2%에 불과합니다. 21.8%는 실업 상태에 빠지고, 43.1%는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됩니다. 졸업 이후 일자리를 찾기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리고, 고용보험 가입 경험도 없는 20대는 그동안 아무런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물론 10개월이 지난다고 해서 누구나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0.3%로 OECD 국가 평균 50.7%에 비해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 실업률은 22%에 달합니다.

수입과 일자리 모두 보장되지 않지만,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졸업생의 67.7%는 빚더미로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지고 있는 빚은 평균 1,308만 원이고 대부분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빚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취업을 위한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최근 3개월 동안 취업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취업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28만 원에 달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은 이렇게 빚더미 위에서 쌓여 집니다.

취업에 성공한다고 해도 근심 걱정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대 초반 비정규직 비율은 80%에 달하고, 20대 후반 비정규직 비율은 40%에 달합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당장의 저임금과 차별도 문제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더 낮

고, 그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비율은 19.8%로, 비정규직 5명 중에 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자라-주가스펙프리 3박자 청년 정책... With a little help

진보신당은 2012년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습니다. 아주 작은 도움만으로도 그들은 스스로 싹을 틔워 아름다워나아가 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일자리, 주거, 그리고 스펙프리 3박자 정책이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약 : 3포(抛) 세대에 연애와 일자리를 허(許)하라

1. 내일은 정규직 -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 노동시간 상한제 등 칼퇴근 명랑사회
 - 비정규직 사용 억제,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 구직 및 실업자에게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실업수당 지급
2. 청년주거 독립
 - 35세 미만 1인 주거 전세대출 허용
 - 투기 주택 강제 수용, 1인 주거 공공주택 확대
 - 월세 금리연동제로 월세 반값 실현

3. 차별 없는 스펙 프리 사회

- 취업과 무관한 학력-스펙 요구 제한
- 대학 통합 네트워크 설립, 대학 서열 해체
- 대학까지 단계적 무상교육 확대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는 당당한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스템 정비, 서비스 공공성 강화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 위한 예산 확보

장애인의 노동권과 충분한 소득 보장

소수 장애인의 인권 보장으로 전체 장애인의 인권 증진

장애인 권리 옹호체계 구축



보이지 않는 장애인, 닫혀 있는 지역사회

한국의 장애인 인구는 450만여 명, 전체 인구의 10%입니다. 그러나 거리를 걷다 보면 장애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 갇히고 집 안에 갇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만나고 교류할 수 없는 것이 한국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90%는 후천적 이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율 세계 1위, 산재 1위인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편하고 안전하면 우리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장애인이 배고프고 외로우면 우리 모두가 배고프고 외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은 지역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을 집 바깥으로, 시설 바깥으로 나오게 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임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일터로, 지역사회로

무엇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로이 타고, 눈치 보지 않고 부담 없이 활동보조인과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 건설과 수용 위주의 장애인 정책으로는 안 됩니다.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자립하는 장애인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공약 : 간판이 아닌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5대 전략

1. 장애인 복지시스템 정비, 서비스 공공성 강화
 - 장애등급제 폐지를 넘어 장애등록제 폐지로
 - 부양의무제 폐지로 복지 책임의 사회화
 - 장애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2.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 위한 예산 확보
 -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을 OECD 평균인 3.4% 수준까지 확보
3. 장애인의 노동권과 충분한 소득 보장
 - 기초법에 따른 급여수준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상향조정
 - 소득활동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월 100만 원 생계비 보장
 - 장애인 근로지원인 이용시간 확대, 근무조건 보장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중증장애인 비율 50%로 확대
4. 소수 장애인의 인권보장으로 전체 장애인의 인권증진
 - 발달장애인법 제정
 -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지원
5. 장애인 권리 옹호체계 구축
 - 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 권리옹호 관련 전달체계 구축
 - 사회복지 시설 관리감독 강화와 탈시설 지원

소수자

평등, 건강, 안전이 보장되는 소수자의 삶

모든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는 기본법 제정
비혼 가구 및 비혈연 가구의 기본권 보장
스스로 확인한 성 정체성 보장과 지원



무지개 정치 3단계 추진과 4대 과제

진보신당은 강령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모든 사회적 차별 및 편견에 저항하는 장애인, 성소수자 및 이주민 등 다양한 소수자의 정당”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특히 성소수자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 대하여 “이게 사는 건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그릇된 인식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실제 조직화된 소수자 학대 범죄(gay bashing)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별의 문제는 제도적으로도 계속되고 있으며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정체화한 성별을 무시당한 채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대상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과 혐오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진보신당은 이처럼 오도된 관념에 뿌리박은 공동체를 향한 도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제도적 및 행정적으로 성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진보신당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소외의 현실을 극복하고 평등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3단계의 과제를 설정하고, 자세한 내용을 공약으로 제출합니다.

혐오와 차별의 금지 및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



소수자의 정치세력화로 민주적인 무지개 정치 실현



건강하고 강력한 공동체의 건설

공약 :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고 무지개정치의 실현으로

1. 모든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는 기본법 제정
 - 모든 차이로 인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차별철폐 기본법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및 법무부 등으로 이루어진 차별시정기구 설립
2. 비혼가구 및 비혈연가구의 기본권 보장
 -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동반자법의 제정
 - 조세, 연금, 의료, 보험, 주거의 분야에서 동성 배우자의 평등권을 인정
 - 재산권, 사회보장, 조세 등에 혈연 가족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

3. 스스로 확인한 성 정체성 보장과 지원

-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 성전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항목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

감사의 말

이 정책공약 책자는 진보신당 출판동호인모임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작에 도움을 주신 조혜원, 최세정, 이준희, 이상덕, 이광호 님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펴낸 곳 :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펴낸 날 : 2012년 3월 22일

판매가격 : 3,000원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801호

전화 : 02-6004-2000

팩스 : 02-6004-2001

이메일 : newjinbo@gmail.com

웹사이트 : <http://newjinbo.org>